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참고자료**	http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조영신과장(2110-4890), 김성용사무관(2110-4893)

국민안전 위협하는 유사(가짜)석유와 전면전 돌입

-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, 「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」 발표
- 석유관리원에 불법시설 점검권한, 유사석유 제조판매 중지 권한 부여 추진
- 유사석유 신고포상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최중경)는 최근 유사석유 문제가 단순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게 됨에 따라,

○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**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」을 발표**함

□ 최근 유사석유 유통은 **비밀탱크 설치, 원격수신장치** 등을 조작하여 단속을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**지능적으로 변화**하고 있어,

○ **단속권한**이 여러 기관에 **분산**되어 있고, **처벌의 실효성도 부족**하여 **대응에 한계**가 있었음

□ 이에 따라, 정부는 **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**과 **실효성 있는 처벌**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음

□ 먼저, **금년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**하여 유사석유 제조·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,

○ 앞으로도 **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**하여 유사석유 취급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

□ 또한, 전문기관인 **한국석유관리원**에 **비밀탱크, 이중탱크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, 유사석유 제조·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 부여**를 통해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,

○ 현재 105명(현장인력 70, 시험원 35, 1인당 검사 업소수 190개)에 불과한 **단속인력을 대폭 확대**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

□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**GPR*,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도입**하고,

* GPR(Ground Penetration Radar) :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(약 1억원/대)

○ 유사석유 **신고포상제 금액을 상향조정**(20→50만원)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음

□ 한편,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**비밀탱크,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**는 **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**하는 **'원 스트라이크 아웃제'**를 도입하고,

○ 수억원의 부당이득(최고 2억원/월)에 비해 적은 **과징금 액수를 상향조정(5천만원→1억원)**하는 등 **단순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**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,

○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**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포함**할 계획임

□ 이 밖에도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**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* 구축 및 등록 의무화** 법안을 검토하고,

* 정유사 ERP, 석유판매업자 POS 등을 통합관리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

○ **‘유사석유’를 ‘가짜석유’로 용어 변경**하여,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,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토록 하고, **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**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.

<붙임> 「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」